

김종인 이해찬 없이 선거 치를 수는 없다

태평로



황대진
논설위원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신당을 거론할 때 '진짜 탈당할 수 있을까' 궁금했다. 얼마 뒤 그가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났던 얘기를 듣고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했다. 김 전 위원장은 신당을 조직할 인력과 경험이 있다. 내년 총선에서도 모종의 역할을 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자만 당내 영향력은 여전히다. "민주당이 내년 총선에서 과반을 넘어야 한다"며 전국을 돌며 당원 교육 중이다.

이대라면 다음 총선에도 김종인, 이해찬 두 사람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것이 과연 나라와 국민을 위해 바람직한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단지 나이가 많다는 이유에서가 아니다. 두 사람 건강은 큰 문제가 없어 보인다. 이들이 정치를 보는 관점, 그간의 행태가 다음 총선을 통해 우리가 만들어갈 대한민국에 맞느냐가 문제다.

김 전 위원장은 호불호가 강하고 자기중심적이다. 자신이 상황을 통제할

수 없게 되면 "더는 못 하겠다"며 떠난다. 그리고 돌던 당을 비난한다. 정치적 판단도 자신이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르다.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시절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과거 약연이 있는 안철수 후보에게까지 입당을 권유 하더니, 당을 떠나고 나서는 국민의힘을 '홍당무'에 비유하며 윤석열 후보의 입당을 만류했다. 유력 대선 후보를 국민의힘이 아닌 자신의 영향력 아래 두고 싶어하였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2년 전 금태섭 전 의원이 신당을 타진하

자 "제3지대는 없다"고 했지만, 요즘은 "신당 만들면 수도권 30석도 가능하다"며 들고 있다.

이 전 대표는 운동권 정치의 '대부'다. 사고 방식도 민주화 운동 시절에 머물러 있다. 자신이 정당하다고 믿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지난 총선 때 비례 위성 정당을 창당했다. 같은 운동권 출신 유인태 전 의원조차 "천벌 받을 짓"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한일 갈등이 총선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란 보고서를 만든 것도 이 전 대표 시절이다. 자기편을 법을 어겨도 괜찮다고 한다. 정의연 공금 횡령 의혹이 터지자 윤미향 의원에게 "굴복하지 말라"고 했고, 서울대가 유죄 판결을 받은 조국 전 장관을 파면하자 "무도하다"고 했다. 공정과 상식은 인중에 없다.

'3김' 이후 한국 정치는 김종인·이해찬을 빼고 얘기하기 어렵다. 하지만 두 사람은 나라와 국민의 미래보다 어떻게든 선거에 이겨서 본인과 자기편의 권력을 키우는 데 관심이 더 많았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김 전 위원장이 필요한 당은 망하기 직전의 당이다. 당을 회생시키고 대가로 정치적 지분을 요구한다. 이 전 대표가 필요한 당은 민주당뿐이다. 그의 구태 정치의 입장은 민주당에 해가 될 것이다. 이제 김종인·이해찬 없이도 성공하는 당이 나올 때가 됐다. 대한민국 정치가 발전했다는 증표가 될 것이다.

김·李 총선 앞 왕성한 활동
한국 정치 수십 년 좌우한 두 사람
새 시대 변화 이끌 수 있을지 의문
이들 없어도 성공하는 당 나와야

수 없게 되면 "더는 못 하겠다"며 떠난다. 그리고 돌던 당을 비난한다. 정치적 판단도 자신이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르다.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시절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과거 약연이 있는 안철수 후보에게까지 입당을 권유 하더니, 당을 떠나고 나서는 국민의힘을 '홍당무'에 비유하며 윤석열 후보의 입당을 만류했다. 유력 대선 후보를 국민의힘이 아닌 자신의 영향력 아래 두고 싶어하였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2년 전 금태섭 전 의원이 신당을 타진하

수 없게 되면 "더는 못 하겠다"며 떠난다. 그리고 돌던 당을 비난한다. 정치적 판단도 자신이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르다.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시절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과거 약연이 있는 안철수 후보에게까지 입당을 권유 하더니, 당을 떠나고 나서는 국민의힘을 '홍당무'에 비유하며 윤석열 후보의 입당을 만류했다. 유력 대선 후보를 국민의힘이 아닌 자신의 영향력 아래 두고 싶어하였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2년 전 금태섭 전 의원이 신당을 타진하

김준의 맛과 섬 [163]

제주 구엄리 돌소금

제주도는 소금이 귀한 섬이다. 그 이유로, 소금을 생산하기 위해 꼭 필요한 깃발이 귀하다. 또 해안의 바닷물은 곳곳에서 솟는 용천수로 싱겁다. 게다가 소금을 굵기 위해서 꼭 필요한 빨갛다 부족하다는 것을 짚는다. 이러한 제주의 환경을 잘 보여주는 소금 생산 방식이 구엄리 '돌소금'이다. 구엄리는 제주 서귀포시 애월읍에 있는 해안 마을이다.

많이 들었다. 이어 돌소금밭을 안내할 사람이 없다. 재현 행사는 언감생심 말도 꺼내지도 못한단다.

돌소금밭의 역사는 16세기로 올라간다. 당시 제주목사로 부임한 강여제가 염법을 보급했다는 기록이 있다. 마을 앞 해안도로와 주차장까지 포함해 약 1500평에 이르는 넓고 평평한 암반이 돌염전이었다. 이런 지형을 제주에서는 빌레라고 부른다. 그래서 소금 빌레라고도 한다. 30~40여 가구가 바닷물이 많이 드는 날이면 밤낮을 가리지 않고 돌소금밭에 바닷물을 떠다 붓고 햇볕에 증발을 시켜 소금을 만들었다. 어느 날은 잔물을 모아 솥에 넣고 삶기도 했다. 이렇게 돌소금을 생산하는 일이 나 이웃 장전, 소길, 수산 등까지 등에 지고 가서 판매하는 일은 모두 여성이



감당했다. 물질도 해야 하고, 발일도 해야 하고, 부엌일도 해야 했다. 날씨가 좋은 날은 일주일, 좋지 않으면 스무 날도 더 기다려야 했다. 소금을 팔고 조와 메밀 등 곡식과 바꿔왔다. 1950년대 중반 6·25전쟁 이후 육지와 제주를 잇는 배길이 생겨나고, 천연염전에서 생산한 값싼 소금이 들어오면서 돌소금 생산도 멈췄다. 오랜만에 부축을 받고 돌염전에 나온 조씨는 소금 생산을 할 수 없는 것을 안타까워했다. 경치가 좋아 찾는 여행객이 많아 체험이나 돌소금을 마을 상품으로 팔 수 있으면 좋겠다고 가서 판매하는 일은 모두 여성이

제주시에서는 2010년대 초반 돌소금밭을 문화유산으로 지정하려고 했었다. 당시 마을 주민들은 돌소금밭이 마을 발전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속에 전통 소금을 재현했다. 하지만 거기까지였다. 10여 년이 훌쩍 지나 이제 안내판의 글씨도 지워져 잘 보이지 않는다. 그사이 전통 소금 재현에 큰 역할을 했던 조두현(87) 삼촌도 나이가

社 說

영터리 선거법, 이번에 안 고치면 나라가 우스워진다

정파를 초월해 모인 정치인들이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선거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했다. 총선을 5개월 앞두고 각자 총선 기획단을 발족시키는 등 본격적인 선거 체제에 들어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 하는 요구다. 이들의 지적대로 지금 여야는 선거의 틀에 해당하는 선거법 개정 작업을 방지하고 있다. 선거 1년 전 규칙을 정하려는 법정 시한을 이번에도 무시하고 있다.

현행 선거법은 민주당이 2019년 12월 21대 총선을 4개월 앞두고 국민의힘을 배제한 채 군소 정당들과 함께 강행 처리한 것이다. 세계 민주국가에서 계엄의 틀인 선거법을 한쪽이 일방적으로 바꾼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그런 무리한 일을 벌인 것은 공수처법 통과와 선거법 처리를 군소 정당들과 맞바꾸려 했기 때문이다.

이 선거법의 핵심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의원들도 정확히 이해하기 힘들다는 누더기 내용이다. 가장 문제는 위성 정당이 등장하는 것이었는데 결국 그렇게 되고 말았다. 선거법을 강행한 민주당조차 위성 정당을 만들었다. 심지어 제2의 위성 정당까

지 생겼다. 위성 정당 기호를 앞당기기 위한 '의원 귀주기'까지 벌어졌다. 나라와 선거가 희화화했다.

그런데도 이 문제를 논의해야 할 정치개혁특위는 아직도 개점 휴업 상태. 활동 기한만 계속 연장할 뿐 실질적 논의는 하지 않고 있다. 선거법 개정 방향에 대한 여야의 시각차가 크기 때문이다. 선거법 논의가 표류하는 사이 정의당은 녹색당, 진보당, 민노총과의 선거 연합을 위해 지도부가 사퇴했다. 여야가 밀고 당기다 현행 선거법이 개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비례 의석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작업에 들어간 것이다. 이대로 가면 통진당의 후신인 진보당 등이 원내에 다시 진입할지도 모른다.

역시 선거법으로 인한 해악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윤미향, 최강욱, 김의겸, 양이원영, 김홍걸 등 각종 논란을 일으킨 의원 상당수가 비례 위성 정당 출신인 것은 우연이 아니다. 이번에 영터리 선거법도 고치지 못하면 이틀보다 더 한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되고 나라까지 우스게 될 것이다.



한미 우주동맹 본격화되는데 국회에 발목 잡힌 '우주항공청'

미 국무부·상무부와 한국 정부가 공동 주최하는 한미 우주 포럼과 심포지엄이 서울에서 잇따라 열리고 있다. 오늘 롯데호텔을 비롯한 20개 미국 기업과 31개 국내 기업이 참가해 비공개로 열리는 우주 산업 심포지엄은 특히 의미가 깊다. 한미 우주 관련 기업이 이처럼 대규모로 모이는 것은 사실상 처음인 데다 미국 측에선 백악관 국가우주위원회, 국방부, 미 항공우주국(NASA) 등 우주 분야 주요 부처도 참가한다. 올해 4월 두 나라 정상이 우주 분야 협력을 확대하는 '한미 우주 동맹'에 합의한 이후 후속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아니고 있다. 우주는 더 이상 과학기술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점점 군사화·무기화되면서 외교·안보·경제를 포괄하는 전략적 공간으로 바뀌고 있다. 우주 기술을 이용하면 적국의 군사·정치·경제·사회 동향 탐지는 물론이고 타격 목표까지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다. 우주 기반 통신은 군의 작전 능력을 비약적으로 높여준다.

한국은 첫 우주발사체 누리호 발사 성공으로 중량 1t 이상 위성을 자력 발사할 능력을 갖춘 일곱 번째 우주 자립국이 됐지만 우주 선진국과 비교하면 걸음마 수준이다. 선진국 우주 산업은 국가 주도도 기술 개발이 이뤄지던 '월드 스페이스'에서 기술 혁신을 통해 민간 기업이 적극 뛰어들어 경쟁하는 '뉴 스페이스' 시대로 가고 있다. '우주 산업혁명'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우리나라는 지금 우주 산업을 단숨에 끌어올릴 분기점에 서 있다. 국제적으로는 우주 최강국 미국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고, 미국 주도의 달 탐사 프로그램 '아르테미스'에 10번째 참여국이 됐다. 우리 힘으로 발사한 누리호 개발에는 국내 민간 기업 300여 곳이 참여하는 등 민간 기업들도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2020년 520조원 규모이던 세계 우주산업은 2040년 1400조원 규모로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주 발사체 비용을 급격히 낮추고 재활용하는 등 우주 개척을 통해 과학기술의 비약적 발전이 일

이 중요한 시기에 정작 우주 개발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우주항공청은 국회에 발이 묶여 언제 출범할지 불확실한 실정이다. 지난 4월 정부가 제출한 '우주항공청 특별법'은 아직 상임위 문턱도 넘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이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로 발목 잡아 석 달 넘게 논의조차 못 했고 우여곡절 끝에 이견은 정리됐지만 여야 합의 사항을 특별법에 담아 절차를 거치려면 9일 본회의 처리도 불가능하다. 더 늦지 않게 11월 내로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통과시켜야 한다.

아무리 선거용이라도 해서는 안 되는 일 있다

환경부가 식당·카페 등에서 일회용 종이컵 사용 금지를 철회했다. 카페에서 플라스틱 빨대, 편의점에서 비닐봉지 사용도 계도 기간을 연장해 한동안 단속하지 않기로 했다. 고물가와 고금리 상황에서 연장해 한동안 단속하지 않기로 했다. 고물가와 고금리 상황에서 연장해 한동안 단속하지 않기로 했다. 고물가와 고금리 상황에서 연장해 한동안 단속하지 않기로 했다.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금지했다. EU는 2021년 7월부터 빨대 등 플라스틱 일회용품 사용을 금지했고 베트남도 2025년부터 호텔이나 관광지 등에서 플라스틱 일회용품 사용을 금지할 예정이다. 한국만 이런 국제사회 흐름에서 역행하게 됐다. 지난해 환경부가 의뢰한 여론조사에서는 "일회용품 규제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응답자가 87%에 달했다. 국민들도 좀 불편하더라도 일회용품 사용량 절감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고 실천할 준비를 하는데 정부가 모두 물거품으로 만들었다.

원래 24일부터 단속과 과태료 부과를 할 예정이어서 많은 업소가 이에 맞추어 준비하고 있었다. 그런데 시행을 보류해 앞두고 돌연 백지화한 것이다. 중요한 환경 정책이 설득력 있는 설명도 없이 후퇴했다. 더구나 커피 전문점 등에서 다회용 컵 사용이 익숙해지는 시점인데 정책이 뒤집혀 그동안 이뤄진 성과도 물거품이 됐다. 환경부는 규제를 완화하면서 일회용품을 줄일 별다른 대안도 내놓지 않았다. 정부는 지난 9월에 일회용품 보증금제도 지자체 자율에 맡기는 방식으로 사실상 폐지시켰다.

이번 일회용품 금지 철회는 지난 5일 발표한 주시 공매도 전면 금지처럼 총선용 대책이라는 데 이견이 없다. 정책 권한을 전 정부가 그 권한을 선거에 알개 모르게 이용하는 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나 있는 일이다. 전임 민주당 정권은 노골적으로 선거용 돈까지 뿌렸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약속한 정부다. 실사 총선용 정책을 펴더라도 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것이 있다. 일회용품 금지 철회처럼 모처럼 좋은 방향으로 가는 일을 뒤집는 것은 후자에 속한다.

2018년 기준 연간 일회용 컵 사용량만 294억개다. 이런 일회용품을 규제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다. 뉴질랜드는 올 7월부터

인요한 혁신위, 늘어지면 안 된다... 국힘을 향한 3가지 권고

뉴데일리
newdaily.co.kr

- ① 혁신위 활동은 12월 중순까지
- ② 혁신안 나오면, 국힘 현 지도부 총사퇴
- ③ 참신한 인재 극적 등용

영남 다선 의원들과 친윤(親尹) 의원들에게 혐의 출마를 권유한 것은, 나름 만한 이야기다. 그러나, 풍파만 일으키고 효과는 없을 방식은 피해야 한다.

진짜 혁신안에 빨리 집중하라

혁신 이슈, 얼마든지 제기하라. 그러나, 빨리 다른 이슈로 넘어가라. △ 국회의원 수 축소 △ 비례대표 폐지 △ 의원특권 폐지 △ 전자개표 퇴출 · 수개표(手開票) 도입 △ 사전투표 폐지 등, 진짜 혁신안들이 산처럼 쌓여 있다. 내부 총질 끝들에게 그렇게 오래 매달려서야, 혁신안제 다 할 참인가?

윤석열 대통령·국민의힘 자유 진영에 당장 절실한 것은, 하루라도 속히 국민의 힘 지휘부에 매력적이고 전투적인 새 얼굴들을 갖다 붙이는 일이다. 비대위 체제로든, 빗으로든.

[윤석열 1년 반] 탓 아닌 [문재인 5년] 탓

이번 주 초, 윤석열 지지율은 급반등했다. 그 직전, 윤석열 지지율은 급락했다. 좌익과 [기회주의] 언론들은 그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 이념을 강조했기 때문"이라 씩으다. 거짓 선동이자, 가짜 뉴스였다.

민생이 힘든 건, [윤석열 1년 반] 탓 아닌 [문재인 5년] 탓이다. 문재인이 ▲ 부동산 정책 ▲ 소득 주도 성장 ▲ 퍼주기 ▲ 극단 노동정책 ▲ 기업 좌악시 ▲ 국가부채 급등 ▲ 탈원전인 민생을 망쳤다.

여권의 실책도 물론 있다. △ 홍보 △ 선전 선동 △ 설득 △ 전파(傳播) △ 판촉(販促) △ 상품성이 약했다. △ 응집력 △ 선투력 △ 사명감이 뒤졌다. 이럴 땐 여권 지휘부를 확 바꾸는 게 급선무이자 필수적이다.

관건은 새 인물 전면 배치

그래서 권한다.

(1) (인요한 혁신위원회)는 존속 시한을 연말에서 12월 중순까지로 대폭 앞당겨라. 마지막 날에 그간의 혁신안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발표하라. 그리고 큰 무대를 떠나라.

(2) 혁신안을 인준하는 즉시, 국민의힘 현 진영은 총사퇴하라. 그리고 새 여당 지휘부를 구축하라.

(3) 새 지휘부로는 △ 투철한 주적(主敵) 개념 △ 스타성 △ 수월(秀越성) △ 전투력 △ 발랄함 △ 감수성을 갖춘

인재들을 뽑아 올려라. 구닥다리 NL, 끈들의 궤변·역자·허위를 일거에 박살 낼 용장(勇將)들을!

예컨대 한동훈? 원희룡? 박민석? 신원식(행정부에 그냥 있더라도)? 그리고 재야 투사들!

[맹목] 국민의힘 털어버리고, 싸워 이기는 국민의힘 만들라!

류근일

뉴데일리 논설위원 / 전 조선일보 주필



류근일 칼럼 더보기

국민훈장 무궁화장 받은 김박 회장이 보여줬다... '기업인의 애국'이란 이런 것



윤대통령엔 '극단정치', 트루스트엔 '극우'... 유사전체주의의 '낙인찍기' 행패



이 기사는 인터넷신문 뉴데일리(www.newdaily.co.kr) 칼럼으로 11월 6일 게재 되었습니다.

